

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

이삼식
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

KI 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목차

I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원인

II 저출산의 파급효과

III 외국의 저출산대책 사례

IV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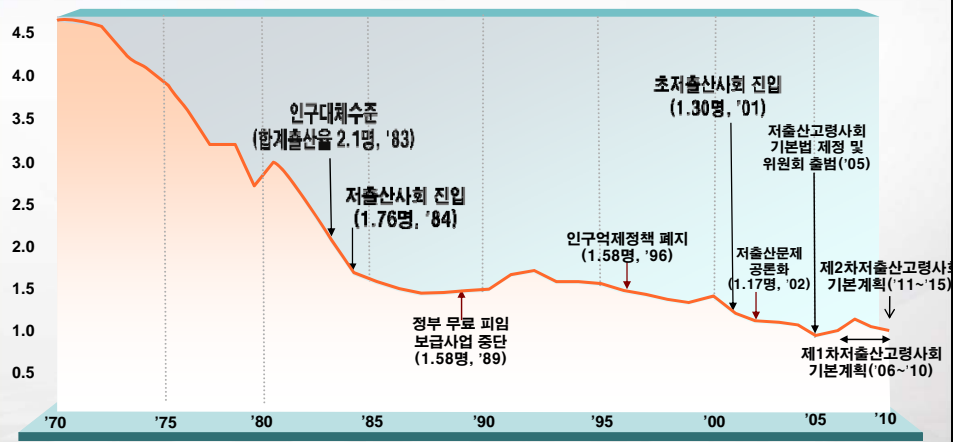
KI 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원인

출산을 추이

단기간에 급격한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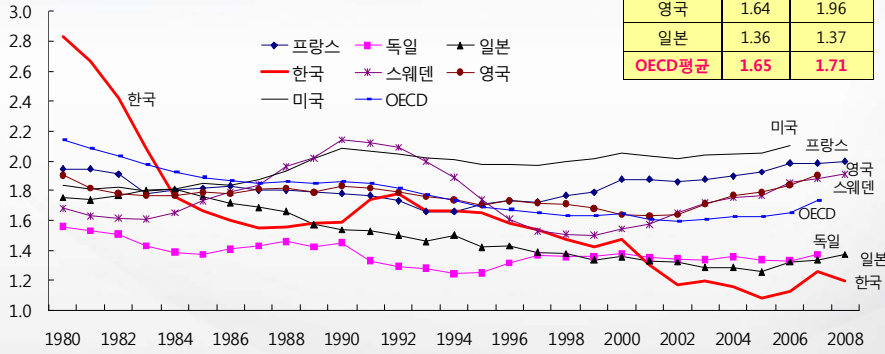
- '60년 6.0 → '83년 인구대체수준(2.1명) → '98년 1.48 → '01년 1.30 → '05년 1.08
* '07년 1.25명으로 일시적 상승 이후 '08년(1.19명), '09년(1.15명) 지속 감소



출산을 국제비교

OECD국가와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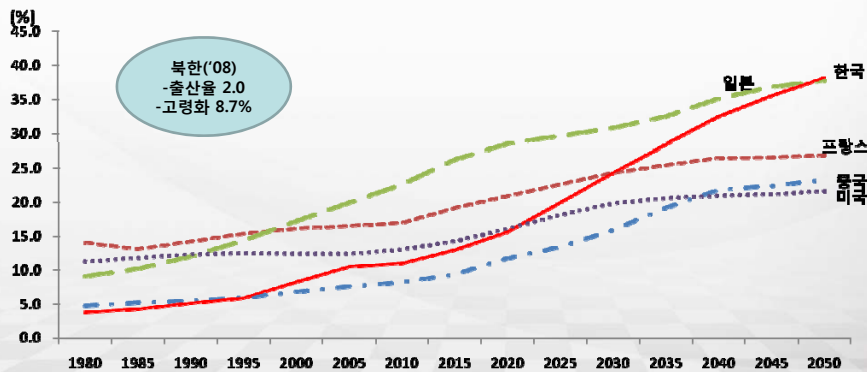
	2000	2008
프랑스	1.87	2.00
미국	2.06	2.12('07)
영국	1.64	1.96
일본	1.36	1.37
OECD평균	1.65	1.71



고령화 현황 분석

세계 최고 속도, 최고 높은 수준의 고령화 예상

- (총인구 고령화) 총인구 중 노인비율 : '10년 11% '50년 38.2%(세계최고)
* 고령화→ 초고령사회 26년, 일본 36년, 프랑스 155년, 독일 78년, 이태리 81년, 미국 88년
- (노동력 고령화)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 : '05년 38.5세, '20년 42.3세, '40년 44.1세
- (고령자 고령화) 전체노인 중 중기(75~84세), 후기노년층(85세 이상) 비중 급증
* 후기노년층 : '10) 7.0% → '30) 10.5% → '50) 20.9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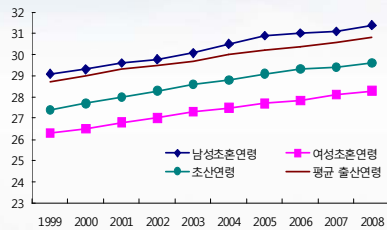
저출산 원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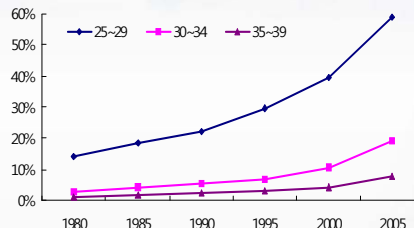
저출산 원인

만혼화 심화

초혼연령 변화



25~39세 여성의 미혼율



미혼남녀의 비혼화·만혼화 경향 증가 예상

○ 향후 결혼의향이 없는 비율 증가

- 미혼남성 '05년 5.6% → '09년 7.6%, 미혼여성 '05년 8.8% → '09년 10.0%
- * "반드시 결혼 해야한다(결혼 필요성)"는 태도는 미혼남성 23.4%, 미혼여성 16.9%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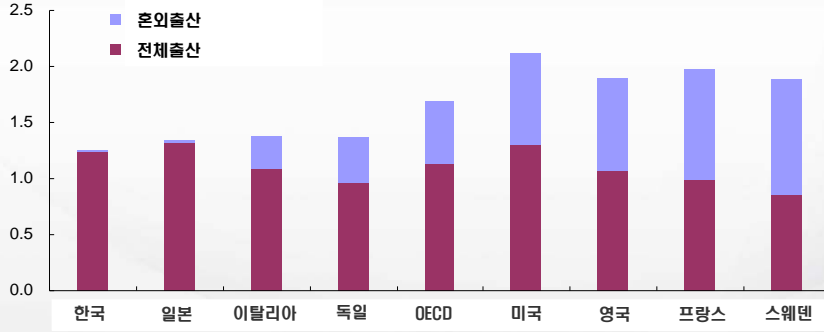
○ 결혼계획 연령이 더 늦추어지는 경향 뚜렷

- 미혼남성 : '05년 31.8세 → '09년 32.1세, 미혼여성 : '05년 29.7세 → '09년 30.6세
- * 이상적 결혼연령 남성 31.8세 여성 29.5세

저출산 원인

낮은 사회문화적 수용성

OECD 국가의 혼외출산 비율, 2007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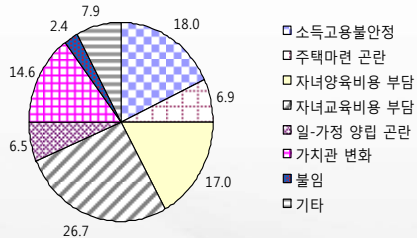
출처 : OECD family database

저출산 원인

추가출산 중단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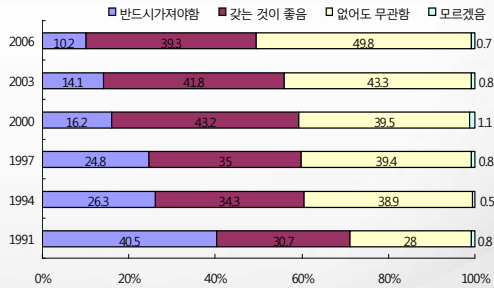
가치관 변화

1자녀 유배우여성의(20~39세) 추가출산 중단 이유



출처 : 이삼식 외(2009). 2009년도 전국결혼및혼외출산동향조사

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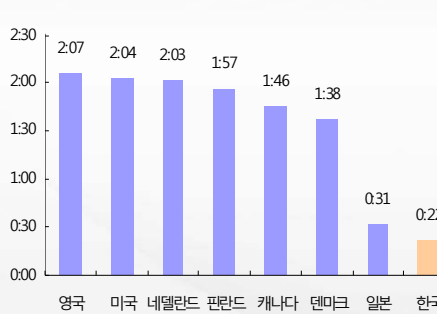


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전국출산력 조사 각년도

저출산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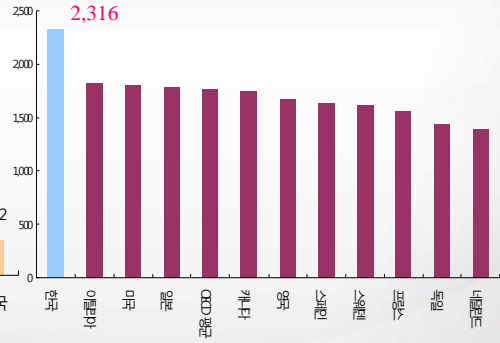
일-가정양립 곤란

남성의 1일 가사활동 시간, 2001



출처 ; OECD family databas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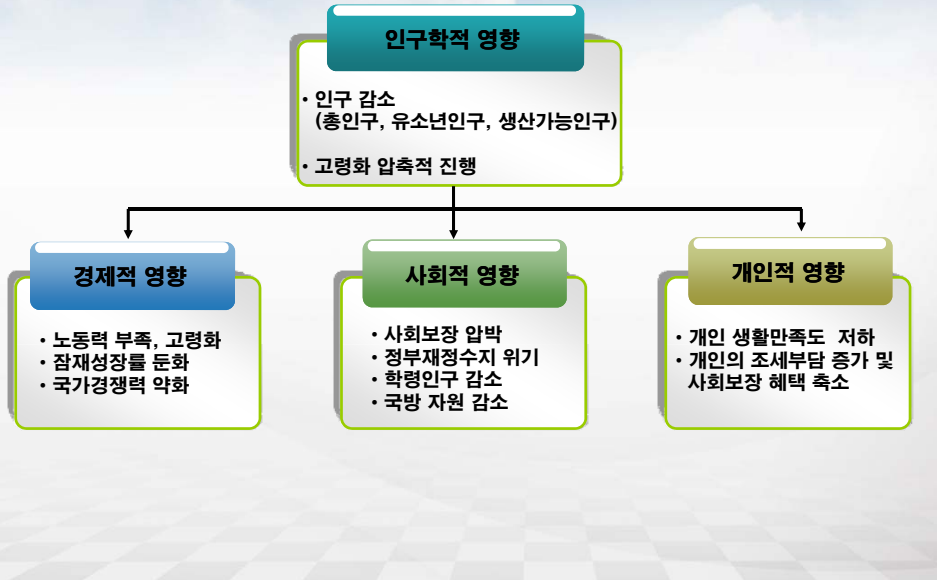
연간 근로시간, 2007



출처 ; OECD family databas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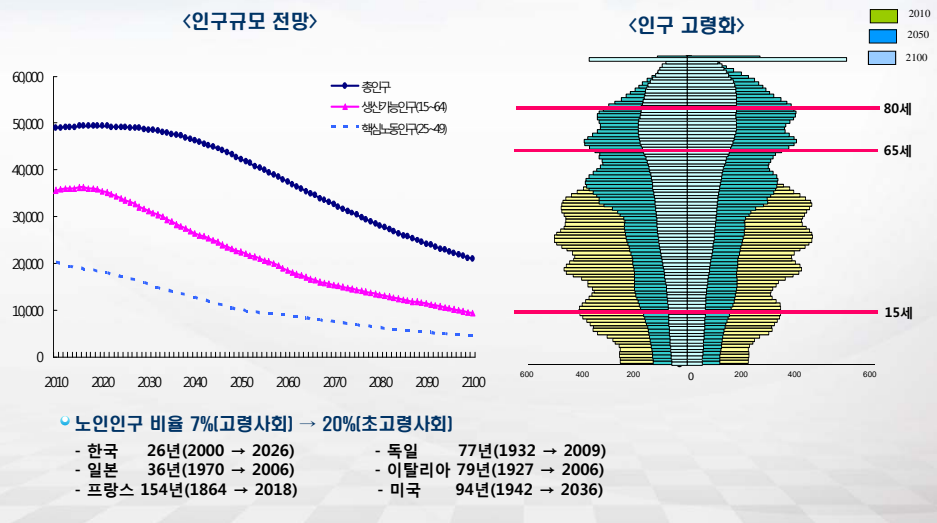
저출산의 파급효과

저출산의 파급효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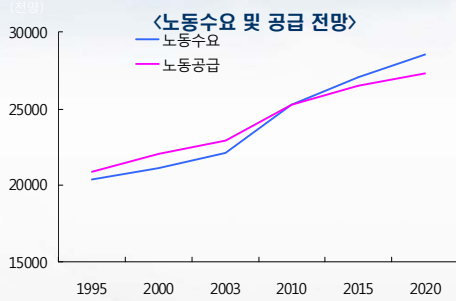
인구학적 파급효과

인구규모 급격 감소 및 고령화 가속화



경제적 파급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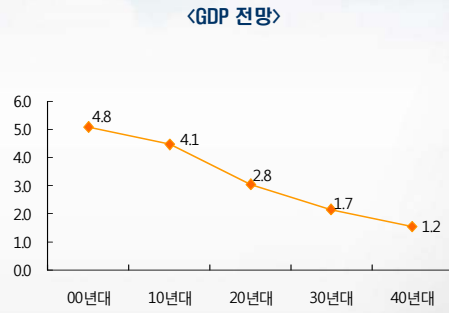
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



○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로 노동생산성 저하

- 생산가능인구 감소 : 3,453만명('05) → 2,242만명('50)
- 생산가능인구 고령화 : 38.0세('05) → 43.2세('30) → 43.5세('50)

경제성장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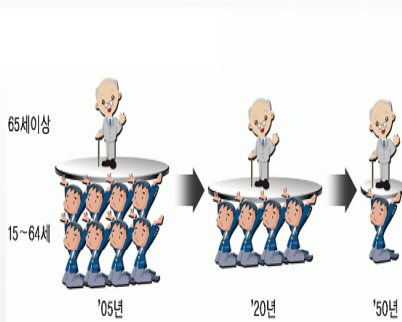


○ 노동생산성 저하, 저축감소, 소비·투자위축, 재정악화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(KDI, 2007)

- 잠재성장률 둔화 : 4.8%('00년대) → 1.2%('40년대)
- 재정안정성 취약 : GDP의 약 10% 재정적자('40년대)

사회적 파급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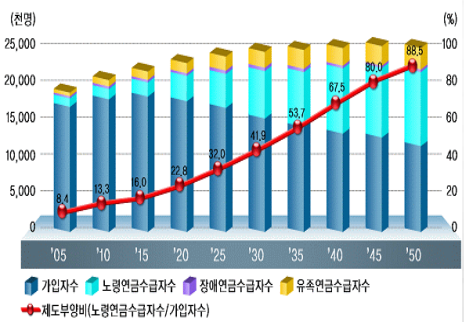
사회보장부담 가중



○ 노인1명당 부양자수 : 8명('05) → 4명('22) → 2명('37)

국민연금 수급자 > 가입자('55년)

* 국민연금재정고갈('66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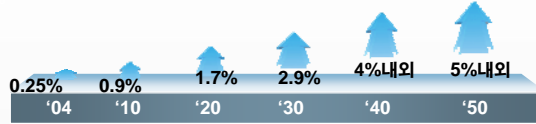
*자료 : 국민연금발전위원회,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(2003)

○ 연금보험료 부담 증가 : 30%('50) → 39%('70)

사회적 파급효과

생산인구감소 → 세수감소, 사회보장비 증대 → 재정수지악화

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강화 → 노인복지지출 증가



●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, 건강보험 지출 확대

	'08	'10	'15	'20	'30
합계	4.0	6.3	7.3	8.5	11.8
공적연금	1.8	2.7	3.3	4.2	6.4
건강보험	2.2	3.6	4.0	4.3	5.4

<GDP대비 비중,%(KDI, '06.9)>

사회적 파급효과

● 가족기능 약화 및 다양한 복지 요구
폭증

가족기능 약화, 가족복지의 국가·사회 공동부담 전환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 폭증

●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 증가

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부담 증가, 부담의 적정성·형평성 논란 등 세대간 갈등 내재

외국의 저출산대책 사례

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세 갈래길

프랑스식 접근

출산장려 - 적극적 재정 투입

스웨덴식 접근

여성인력활용-일가정양립,
보육, 성평등

독일식 접근

이민수용
(최근 정책전환 - 출산장려)

외국 정책 경험

K-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
북유럽 스웨덴, 1.91('08)

- 가사-육아의 남녀분담
- 일-가정 양립 지원
- 자녀양육의 경제적 지원
- 육아 인프라
-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
- 이민의 사회적 수용

볼어권 프랑스, 2.00('08)

- 가사-육아의 남녀분담
- 일-가정 양립 지원
- 자녀양육의 경제적 지원
- 육아 인프라
-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
- 이민의 사회적 수용

영미권 미국, 2.12('08)

- 노동시장 유연화
- 일-가정양립 용이
- 저비용 민간보육이용 활성화
-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

외국 정책 경험

K-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
독일어권 독일, 1.38('08)

- 가톨릭문화 영향으로 성분업적 역할규범 유지
- 다양한 가족에 대한 소극적 수용
- 일-가정 양립 규란 및 지원 미흡 [노동시장 경직화]
 - 대졸여성 40% 출산 포기
- 자녀 육아·교육비용 지원 미흡
 - 가족수당의 소득대체율 저조
- 보육서비스 부족(0~3세아 대상)

남유럽 스페인, 1.46('08)

- 가톨릭문화 영향으로 성분업적 역할규범 유지
- 다양한 가족에 대한 소극적 수용
- 일-가정 양립 규란 및 지원 미흡 [노동시장 경직화]
- 청년의 자립 규란
 - 25세 이하 실업률 30%, 높은 주택가격
- 자녀 육아·교육비용 지원 미흡
- 공적 보육시설 부족
- 빈곤층 복지위주의 가족정책 한계

외국 정책 경험

일본 1.37('09)

추진정책

- 일-가정 양립 제고(근무방식 개선)
- 육아인프라(보육서비스 다양화)
- 경제적 지원(아동수당)
- 가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
- 청년층 안정화·자립 정책 추진

싱가포르 1.2('06) 대만 1.1('06)

- 일-가정 양립 지원(육아휴직)
- 육아인프라(시설보조금, 외국인 가정부)
- 경제적 지원(조부모 보육급여 지원)
- 가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
- 결혼지원(주택 지원)

한계

- 동아시아적 특수성
 - 가부장적 유교문화 영향으로 성역할 규범 지속
 -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부족(장시간근무 관행, 노동시장 경직화)
 - 다양한 가족형태(동거, 미혼모)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도
- 일-가정 양립지원 미흡
- 적기에 종합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함(단편적 정책 추진)
- 권장·계몽 위주 비예산사업의 한계

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

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단계별 추진방향

KI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
제1차
(06-10)

- 출산·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
-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

제2차
(11-15)

- 점진적 출산을 회복 기반구축
-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

제3차
(16-20)

- OECD국가 평균수준 출산을 회복
- 고령사회 성공적 적용

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(2006-2010)

KI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
비전

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

목표

2011-20: 출산을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
2006-10: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

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
사회적 분위기 조성

정책추진체계의
효과성 제고

추진과제

출산과 양육에
유리한 환경조성

- 출산·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
- 일-가정 양립가능 사회시스템 구축
- 가족친화·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

고령사회 삶의 질
향상 기반 구축

-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
- 건강·의료보장체계 구축
- 노인친화적 사회기반 조성

미래 성장동력
확보

- 여성·고령 인력 활용
-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
- 고령친화산업 육성

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

1차 기본계획의 성과

- 저출산·고령화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및 투자 확대
 - 투자규모 증가('06 4.5조→'10 12.4조)
- 저출산 극복 및 고령사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 유도
 - 출산 양육 책임의 사회부담 체계 패러다임 전환
 -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계기 마련
 - 기초노령연금,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대비 제도 도입
- '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' 출범으로 사회운동 확산
 - 범국민적 운동 전개로 승화

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

저출산대책 한계점

- 정책의 사각지대 존재
 -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산층, 맞벌이, 임시일용직 제외
- 출산을 제고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실정
- 상당수 정책들이 영세한 시범사업 수준이거나 지원수준 비현실적
-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양육안전망 미흡
 - 일부 자녀성장단계(보육) 집중 경향
- 기업의 참여 부재
-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미흡

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

고령사회대책 한계점

- 사후적 노인복지정책
- 65세이상 노인과 취약노인 중심 지원
- 기본생활보장 중심
 - 기본소득, 건강보장 등 기본욕구 충족에 집중
-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패
- 노인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건강정책과 건강보험 개편에 대한 정책적 관심 부족
- 노인장기요양의 양적 인프라 확보에 초점

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(2011-2015)

비전

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

목표

2011~15: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
2015~30: OECD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

추진과제

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

- ▣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
- ▣ 결혼, 출산, 양육 부담 경감
- ▣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

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

- ▣ 베이비붐세대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
- ▣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
- ▣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

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

- ▣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
- ▣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
- ▣ 고령친화산업 육성

추진기반

교육홍보 강화 및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유도
법적·제도적·재정적 기반 강화

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(2011-2015)

KI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
제1차 기본계획

제2차 기본계획

저출산

[주요대상] 저소득층
[정책영역] 보육지원 중심

•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
• 일가정양립 등 종합적 지원

고령사회

[주요대상] 65세이상 저소득 노인
[정책영역] 소득보장, 요양보호

• 50세이상 등 베이비붐 세대
• 소득, 건강, 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

공통

[추진방식] 정부주도

• 범사회적 정책 공조

저출산 부문 세부정책

KI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
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



저출산 부문 세부정책

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

1-1.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

- 육아휴직제도 개선
 - * 정액제 → 정률제(조기복귀인센티브)
 - *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(50% → 60%)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
 - *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법제화, 육아기근로시간 계좌제
- 산전후 휴가 등 제도개선(분할사용 허용)

1-2.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

- 유연근로시간제 확산(공공부문부터 확대)
-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(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조정)

1-3.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

- 직장보육시설 활성화(설치기준 완화,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)
- 가족친화기업인증제활성화(인증기준 개선, 인센티브 확대)
-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

저출산 부문 세부정책

결혼·출산·양육 부담 경감

2-1.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

-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(대출기준 2,000만원 → 3,000만원)
-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
 - * 현역입영 대상 유배우자+현역병의 배우자 출산시
 - * 국공립대기숙사 기혼자실 설치, 저소득기혼자 국가장학금 우선
- 결혼 관련 교육,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
 - * '결혼누리' 사이트 운영,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

2-2. 임신·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

- 임신·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
 - * 취약지역 내 산부인과 설립 비용 지원
 - * 대학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실 확대('10년 3개소)
 - * 자연분만 수가 인상 등
- 임신·출산 비용 지원 확대
 - * 체외수정 시술비 100%(300만원)까지 확대
 - *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(30만원 → '12년 50만원)
- 모성·영유아 건강관리 강화
-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

결혼·출산·양육 부담 경감

2-3.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

- **보육·교육비 지원 확대**
 - *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('12년 소득하위 70%)
 - * 맞벌이 소득산정기준 완화(낮은소득 25%→부부합산 25%감액)
- **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**
 - * 둘째아부터 고교수업료, 둘째이상 대학생자녀 장학금 우선
 - * 셋째아부터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(공무원 최대 3년)
 - * 다자녀가정 추가공제 확대(2자녀 50→100, 초과 100→200만원)
 - *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상향(3%→5%),
 - * 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율 인하(4.7% → 4.2%)
- **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**
 - * 공교육 내실화, 입시제도 선진화, 사교육 대체서비스 강화, 학원운영 관리

결혼·출산·양육 부담 경감

2-4.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

- **취약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**
 - * 농어촌/ 취약지역 우선설치, 소규모 시설 확대
- **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**
 - * 평가인증제 개선, 우수시설 공공형/자율형 전환 허용
- **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**
 - * 저소득·맞벌이가정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우선권
 - * 운영시간 반일제/종일제 등 다양화
- **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**
 - * 취업모자녀 틈새시간 지원 확대
 - * 영아종일제 돌봄지원 확대(현 12월 이하, 소득하위 50%)
- **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**
 - *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자격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추진
- **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**
 - * 사회적 기업 육성, 보습학원 전환

**아동청소년의
건전한
성장환경 조성**

3-1.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

-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
-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
- 위기 아동·청소년 자립지원 확대
 - * 두드림존(Do Dream Zone) 연차적 확대

3-2. 아동·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

- 아동·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
- 취약계층 아동 인적네트워크 형성
 - * 1:1 멘토링 휴먼네트워크 지원
-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
 - * 중소규모의 청소년시설 지속 확충
 - * 국제교류, 자원봉사 등 글로벌 활동·문화체험 지속 추진

**아동청소년의
건전한
성장환경 조성**

3-3. 안전한 아동·청소년 보호체계 구축

- 아동·청소년 생활안전 강화
-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
 - * 초등학교 CCTV 조기 설치,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·공개제도 강화 등
 - * 성폭력 피해자 보호·치료를 위한 전담센터 확충(15년까지 5개소)
-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
 - *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시·군구별 단계적 확대(현재 44개소)
-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
 - * 초등학교생「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」대책 추진
 - *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Wee프로젝트 인프라 구축·'아동안전지킴이'확대
-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
 - * 음주청정지역 및 청소년 시설 금연구역 지정·확대,
 - * 학교 주변지역(200m)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

3-4. 아동정책 추진 기반 조성

-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
- 정기적(5년 주기)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

고령사회 부문 세부정책

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



고령사회 부문 세부정책

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

1-1.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

- **고령자 고용연장**
 - *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 완화 : 근로자 대표 등의 → 단체협약/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도입시 지급
 - * 정년연장장려금 정년 폐지시 지급(현 정년연장시 지급)
- **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**
 - * 고령자인재은행 확대('10년 52개소→'15년 60개소)
- **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**
 - *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('10년 32천개)
 - *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운영
- **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**
 - * 퇴직 과학기술인력(3년간, 1인당 연960만원~1,920만원) 및 대기업 인력(1년간, 1인당 월60~120만원)의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
- **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정착**

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

1-2.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

-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
-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
 - *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확대
-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
 - * 퇴직연금 신설 사업장 우선 설정의무 부여
 - * 확정급여형(DB형) 사외적립비율 상향, 소득공제 확대

1-3.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

-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
 - *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('09년 66%→'15년 73%)

1-4.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

- 노후설계 기반조성
-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

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

2-1.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

-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
 - * 노인인력개발원 기능 강화
 - * 직능시니어 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('11년 14개) 및 시범사업
- 일자리 사업 체계화

2-2.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

- 무연금·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
 - * 국민연금과 재구조화 방안 모색
-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
 - * 재직자 노령연금제도 개선(연령별→소득수준별 감액)
 - * 연금수급 연기 범위 확대, 연기가산금 인상(1년당 6%→7.2%)
-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
 - * 농지연금 시행('11년)

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

2-3.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

-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
 - *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 - '12년 목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적용 검토
 - '11년 골다공증 및 '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
-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
 - * 제2단계 국가치매전략 수립, 국가치매사업추진단 운영
- 장기요양보험 내실화
 - * 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, 보험대상자 확대 여부 검토
-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
- 의료비 지출 적정화

2-4. 다양한 사회참여-여가문화기회 제공

-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
-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
 - *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지급(1인당 5만원)

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

3-1. 고령친화적 주거-교통 환경 조성

-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
 - *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
(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%(비수도권 3%))
-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

3-2.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

-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
 - *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('10년 146천명)
- 학대노인의 보호강화
-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

성장동력 부문 세부정책

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



잠재인력 활용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	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	고령친화 산업 육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고령화에 따른 주택 및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정성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국내외 시장 활성화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

성장동력 부문 세부정책

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

1-1.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

-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
 - * 적극적 고용개선조치(AA)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방안 논의
-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
 - * ONE-STOP 취업지원 서비스 실시

1-2. 외국적 동포, 외국 인력활용

-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
 - * 온라인 사증 추천·심사 시스템* 활성화 등 개방적 이민 허용
-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
 - * 고용변동 신고 간소화 및 선발기준 다양화
-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
 - * 다문화가족 이해제고를 위한 학교교육 실시

성장동력 부문 세부정책

K-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
잠재인력
활용기반 구축 및
인적자원
경쟁력 제고

1-3.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

-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
 - *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('14년까지 15백명) 확대
 - * 대학 취업지원역량인증제 도입('11년)
-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
 - *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,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대
 - * 평생학습계좌제 확대(학습자 수 '11년 2만명 → '15년 5만명 확대)
-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

1-4.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방지

-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
-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

성장동력 부문 세부정책

K-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
인구구조
변화에 대응한
경제사회
제도개선

2-1.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

- 교육분야 제도개선
 - * 중장기('08~'15) 교원수급계획('07년) 수정·보완
 - * 기존학교 이전,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적정화 방안 마련

2-2.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

- 주택분야 제도개선
 - *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('13년 ~ '22년) 수립
- 금융분야 제도개선
 - *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

2-3.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

-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
 - * 의무적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(Paygo 원칙) 도입 등
 - *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및 신규 세원 발굴

고령친화산업 육성

3-1.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

-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
- 고령친화제품(서비스) 표준화
- 고령친화제품(서비스) 지정·표시제도 확대

3-2. 국내외 시장 활성화

- 국내 수요기반 확충
 - * 지역사회밀착형 전시-체험관을 운영
-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
 - *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DB 구축 등

3-3.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

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master-plan 수립필요



감사합니다

KI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